

5월 2일 SBS 8뉴스

<차기 정권과 거래? 인양 지연 의혹 조사>

보도 경위 진상조사보고서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처장,

전국언론노조 SBS본부,

한국기자협회 SBS지회

***조사기간: 2017년 5월 4일~ 5월 14일**

***보고서 작성: 최진봉 교수, 김동찬 사무처장**

1. 총평

5월 2일 SBS 8뉴스에서 <차기 정권과 거래? 인양 지연 의혹 조사> 기사가 보도된 경위를 조사한 결과, 취재기자가 의혹이 너무 앞선 나머지 명확한 증거나 근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마치 유력 대선 후보가 자신의 당선을 위해 세월호 인양 시점을 해양수산부와 조율한 것처럼 오해될 수 있는 내용의 해수부 직원 발언을 기사에 포함시키면서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처럼 명확한 증거나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취재기자의 직속상관인 뉴스제작1부장은 당일 편집회의에서 결정한 내용에 배치되는 방향으로 기사를 수정하여 기사의 애초 취지와 다르게 읽힐 가능성을 더욱 키웠다. 나아가, 취재기자가 수정된 기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부장에게 네 차례에 걸쳐 기사제목과 내용의 수정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장은 취재기자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부장의 상급자인 뉴스제작부국장은 편집회의 이후 작성된 기사를 보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보도국장 역시 편집회의 이후 경제부장이 재차 취재원에 관한 문제를 지적했는데도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뉴스제작의 최종 책임자인 보도본부장 역시 해당 기사를 미리 체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게이트키퍼 작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부실한 보도를 하게 된 것이다. 이와 함께 본래 뉴스 편집기능을 중심으로 구성된 뉴스제작1부에서 기사를 작성, 출고하면서 게이트키퍼의 단계가 축소된 뉴스 제작 시스템 상의 문제도 발견하였다. 이 기사의 최초 발제 과정에서 보도가 나가기까지 전 과정을 면밀히 살펴본 결과 외부로부터 압력을 받았다거나 악의적인 의도로 단정할 만한 흔적은 발견하지 못했다. 뉴스의 삭제는 대통령 선거를 코앞에 둔 시점에 보도의 결함으로부터 초래된 광범위한 오해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써 보도본부장의 책임 하에 결정되었음을 확인하였다.

2. 시간대별 정리

일시	행위자	내용	문제점
4월 16일	조OO 기자	해수부 공무원과 통화	
4월 17일	조OO 기자	해수부 공무원과 2차 통화	
4월 18일	조OO 기자	해수부 공무원과 3차 통화	
4월 24일	조OO 기자	해수부 공무원과 4차 통화	
4월 28일	조OO 기자	세월호 인양 의혹 기사 첫 발제	해당 공무원의 발언과 정황 증거 등 부실한 근거로 발제.
	뉴스제작1부장	1차 발제를 수용하지 않고 보 강 취재 지시	
5월 2일 13:00	조OO 기자	세월호 인양 의혹 기사 2차 발제	‘선체조사위 시행령 통과’ 발생 외에 해수부 관련 추가 취재 부족.
	뉴스제작1부장	편집회의의 발제 결정	1차 발제시 문제점 해소되지 않은 채로 발제 채택
14:20	SBS 보도국 부	편집회의에서	해당 공무원의 신뢰성 문제제기 있

	장단	당일 기사 논의	었지만 문제의 발언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음
	보도국장	선체조사위 시행령 통과를 앞세워 신중하게 기사 쓰라고 지시	'신중하게'라는 단서를 달아 발언 녹취 사용을 사실상 허가
17:12	조OO 기자	기사 초고 완료	문제의 발언을 사용하며 특정 후보의 실명을 적시, 선체조사위의 인양 지연 의혹 조사와 해수부 공무원의 '문재인 후보에게 갖다바치는 것' 발언을 병렬 배치해 1차적으로 잘못 읽힐 여지 발생.
17:42	뉴스제작1부장	최종 기사 완료	선체조사위 시행령 통과 부분 줄이고, 박근혜 정권 눈치 보며 인양 지연한 의혹 조사한다는 내용 삭제, '거래 시도 암시 발언' 문장 삽입해 잘못 읽힐 가능성을 더 크게 함.
18:00~19:00	뉴스제작1부장	기사 제목 수정	<인양 고의 지연 의혹..다음달 본격 조사>를 <차기 정권과 거래?...인양 지연 의혹 조사>로 바꿈
17:42~19:20	조OO 기자	뉴스제작1부장에게 기사 내용과 제목 수정 4차례 요청	
18:00~19:00	뉴스제작부국장	기사 읽고 '거칠다'고 생각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음.
18:30	경제부장	보도국장에게 기사에 발언이 인용된 해수부 공무원 신뢰성에 문제 있다는 의견 전달	
	보도국장	기사 취지와 관계 없으며, 편집회의 결과대로 작성될 것이라 판단	최종 기사와 제목을 확인하지 않았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음.
18:30~19:00	보도본부장/앵커	전체 기사 훑어봄	최종 기사와 제목을 제대로 보지 않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음.
19:24	SBS 8뉴스	<차기정권과 거래? 인양 지연 의혹 조사> 보도	
21:35	보도국장	뉴스제작1부장에게 전화해 인터넷 기사 제목 수정 지시	
21:39	보도국장	보도본부장에게 상황 보고	
21:11	손금주 국민의당선대위 수석	"세월호 인양연기 거래한 문재인 후보" 비판 논평 발표	

	대변인		
22:17	박지원 국민의 당 대표	트위터와 페이스북에 “문재인 청탁사건이 해수부 공무원 증 언으로 인양됐다, 문재인이 어 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나, 너무 더러운 일”이라고 올림	
5월 3일 01:39	보도본부장	뉴미디어국장에게 인터넷 기사 삭제 지시	
06:00	SBS 모닝와이드	30초 분량 해명 및 사과방송	
07:20	보도본부장	트위터 통해 사과	
15:25	보도본부장	트위터 통해 재차 사과, SBS 뉴스홈페이지에 사과문 게재	
20:00	SBS 8뉴스	톱으로 5분 30초 해명 및 사과방송	

3. 사실 관계 정리

<취재단계(1)>

4월 16일 뉴스제작1부 소속 조OO 기자는 해수부 공무원에게 전화받음. 이 공무원은 해수부
OOO실 소속으로, 3년 전 경기도 안산에서 만난 일이 있고 조 기자의 전 직장 선배와 친분 있는
사이라고 함. 이 공무원은 조 기자가 OOO실 다른 공무원과 통화하는 걸 옆에서 듣고 전화를 하
게 됐다고 설명. 약 9분 간의 통화에서 이 공무원은 세월호 인양과 관련해 여론 동향을 묻고, 해
수부 내 분위기를 전함. 그 과정에서 예의 “(세월호 인양은) 문재인에게 갖다 바치는 거다”라는 발
언함.

조 기자는 이후 4월 17일, 18일, 24일 이 공무원과 통화하면서 해수부 분위기를 들음. 당시 해수
부가 박근혜 정권의 눈치를 보면서 세월호 인양에 소극적이었다고 생각하던 조 기자는 이 문제를
더 취재해 해수부를 비판하는 방향으로 기사를 쓰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진술.

조 기자는 이 공무원의 직위에 대해, 해수부 사이트를 검색해 찾아봤으며 검색 결과에 따라
‘OOO실 소속 홍보관리관’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함. 직위가 높지 않다는 건 알고 있었기에 급수
를 따로 확인하진 않았다고 진술. 해당 공무원이 언제부터 OOO실에 근무했는지, 세월호 인양 과
정을 충분히 파악할만한 위치에서 계속해서 근무해 왔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음.

<발제 단계(1)>

4월 28일 조OO 기자는 SBS 보도정보시스템 취재정보에 열람권한을 제한해(본인, 뉴스제작1부장) 이 공무원의 발언("세월호 인양, 정권 창출 전 文에 바치는 것")을 중심으로 해당 내용을 올림. 발언 내용 외에 "선체조사위에서 '세월호 인양 고의 지연 의혹'을 조사한다고 발표", "해수부 간부들 사이에 선체조사위 조사가 시작됐다며 주의하라는 내용이 돌았다", "국회 농해수위 관계자도 탄핵 이후 해수부 분위기가 확 변했다고 말했다"는 내용을 함께 담음.

이를 보고받은 뉴스제작1부장은 조 기자에게 통화한 공무원의 직위를 물어봤고, 조 기자가 'OOO 실 소속 홍보관리관'이라고 답하자, '공보과장(4급 상당)'이라고 판단함. 뉴스제작1부장은 이 발언과 정황만으로 기사 쓰기 어렵다며 더 취재해보라고 조 기자에게 지시함.

<취재 단계2>

조OO 기자는 4월 28일과 4월 30일 세월호 선체조사위원,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전 조사관, 국회 농해수위 관계자 등과 통화해 해수부가 탄핵 전후해 개최했다는 비공개 회의 내용 확보를 시도하는 등 추가 취재 진행. 회의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고 대통령 탄핵이 가시화하면서 해수부 분위기가 인양에 적극적으로 바뀌었다는 얘기를 들음. 이후 5월 2일 보도 직전 해수부 공식 입장을 취재하기 전에 해수부의 다른 공무원 취재는 하지 않음.

<발제 단계2>

조OO 기자는 5월 2일 오후 1시쯤 보도정보시스템 취재정보에 열람권한을 제한해(본인, 뉴스제작1부장, 경제부장) 관련 내용을 올림. 세월호 선체조사위 시행령이 오늘 통과됐고 인양 고의 지연 의혹 등을 조사한다는 내용에, 이전에 올렸던 해수부 공무원 발언("세월호 인양은 문재인 후보에게 갖다 바치는 것")을 포함시켜 8뉴스 기사로 발제하자는 내용임.

이를 보고받은 뉴스제작1부장은 편집회의에서 상의해보겠다며 오후 2시 20분 편집회의에서 8뉴스 기사로 발제함.

<편집회의 논의>

5월 2일 오후 2시 20분 편집회의에서 뉴스제작1부장이 조OO 기자의 취재내용을 발제함. 통상 일반 취재부서의 발제와 달리 기획서를 올리지 않은 상태에서 열람을 제한해놓은 취재정보를 회의 참석자들에게 보여주면서 설명함.

참석자 중 누군가가 해당 공무원의 직위를 묻자 뉴스제작1부장은 '공보과장'이라고 답함. 뉴스제작부국장, 정책사회부장, 국제부장, 경제부장 등 참석자 여럿은, 발언한 공무원이 공보과장이라면 해수부 입장을 대표한다고 하기엔 걸맞지 않다며 문제 제기. 보도국장, 뉴스제작부국장 등 주요

책임자는 해당 공무원의 발언 내용("솔직히 세월호 인양은 문재인에게 갖다 바치는 것")을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음.

보도국장은 "선체조사위가 지연 의혹 조사한다는 스트레이트를 앞세워서 해수부 내에도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 있더라 식으로 발언 녹취를 소화하는 쪽으로 제작하자"고 정리함. 8뉴스 큐시트에 기사 제목을 '인양 고의 지연 의혹 조사'라고 붙임.

<기사 작성 및 데스크>

5월 2일 오후 5시 12분 조OO 기자가 기사 초고 작성해 SBS 보도정보시스템 공용기사에 올림. 뉴스제작1부장이 조 기자의 기사를 교정해 오후 5시 42분에 최종 기사 작성 완료.

기사 초고	최종 기사
앵커멘트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에 관한 시행령이 오늘 통과하며 인양 고의 지연 등 각종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에도 속도가 붙게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해수부가 권력의 눈치를 보고 세월호를 인양했다는 취지의 해수부 공무원 발언이 나와 관련 의혹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조OO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에 관한 시행령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해 인양 고의 지연 등 각종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에도 속도가 붙게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해수부가 차기 권력의 눈치를 보고 세월호를 인양했다는 취지의 해수부 공무원 발언이 나와 관련 의혹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조OO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사내용	
오늘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에 관한 시행령이 통과되면서 선체조사위는 정식으로 조사 3개 과에 정원 53명을 둘 수 있게 됐습니다. 선체조사위는 다음달부터 침몰 원인과 각종 의혹에 대한 본격 조사에 나섭니다. 규명 대상에 포함된 '세월호 인양 고의 지연 의혹' 조사도	50여 명의 구성으로 다음 달부터 본격활동에 나서는 선체조사위는, 해양수산부가 세월호 인양을 고의로 늦춰 왔다는 의혹도 조사할 방침입니다. 김창준 선체조사위 위원장 / 지난달 21일 "2015년 4월에 계약해서 대략 2년 걸렸는데 의도적으로 늦게 인양한 거 아니냐는 국민적 의혹이 있었다"

탄력이 붙게 됐습니다. 실패를 거듭하며 지연되던 인양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 서둘러 진행된 것을 두고 해수부가 그간 권력의 눈치를 본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김창준 선체조사위 위원장 / 지난달 21일 "2015년 4월에 계약해서 대략 2년 걸렸는데 의 도적으로 늦게 인양한 거 아니냐는 국민적 의 혹이 있었다" 이와 관련해 해수부 공무원이 고의 지연 의혹을 증폭시킬 만한 발언을 SBS 취재진에게 해 논란을 재점화하고 있습니다. 해수부 공무원 "솔직히 말하면 세월호 인양은 문재인 후보에게 갖다 바치는 거다. 정권 창출되기 전에 갖다 바 치면서 문재인 후보가 비공식적, 공식적으로 약 속했던, 해수부에 수산 쪽 제2차관 만들어주고 해경도 집어넣으려는 거다." 이에 대해 해수부는 세월호 인양은 기술적 문제로 늦춰졌으며, 다른 고려는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선체조사위는 그러나, "해당 발언은 인양이 정치적으로 결정됐다"는 의혹을 뒷받침한다며, 조사 과정에서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의혹을 증폭시킬 만한 발언을 해수부 공무원이 SBS 취재진에게 했습니다. - 해수부 공무원 "솔직히 말하면 세월호 인양은 문재인 후보에게 갖다 바치는 거다. 부처의 자리와 기구를 늘리는 거래를 후보 측에 시도했음을 암시하는 발언도 합니다. - 해수부 공무원 "정권 창출되기 전에 갖다 바치면서 문재인 후 보가 비공식적, 공식적으로 약속했던, 해수부에 수산 쪽 제2차관 만들어주고 해경도 집어넣으 려는 거다." 이에 대해 해수부 대변인실은 세월호 인양은 기술적 문제로 늦춰졌으며, 다른 고려는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선체조사위는 그러나, "문제의 발언은 인양이 정치적으로 결정됐다"는 의혹을 뒷받침한다며, 조사 과정에서 들여다 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

초고 기사는 선체조사위 시행령 통과와 향후 조사, 인양 지연 의혹에 대해 4문장에 걸쳐 서술하
고 선체조사위 위원장의 4월 21일 브리핑 녹취, 해수부 공무원이 의혹 증폭시킬 발언을 했다는
문장, 공무원의 발언 전화 녹취("솔직히 말하면 세월호 인양은 문재인 후보에게 갖다 바치는 거다.
정권 창출되기 전에 갖다 바치면서 문재인 후보가 비공식적, 공식적으로 약속했던, 해수부에 수산

쪽 제2차관 만들어주고 해경도 집어넣으려는 거다.”), 해수부 해명 문장, 선체조사위 입장 문장 순으로 구성됨. (전체 일곱 문장 중 해수부 공무원 발언 한 문장, 녹취 한 개)

뉴스제작1부장이 교정한 최종 기사는 선체조사위 출범과 조사 내용 한 문장과 선체조사위원장 브리핑 녹취, 해수부 공무원 발언했다 한 문장, 해수부 공무원 녹취 1개(“솔직히 말하면 세월호 인양은 문재인 후보에게 갖다 바치는 거다”), ‘거래 시도 암시’ 발언했다 한 문장(부처의 자리와 기구를 늘리는 거래를 후보 측에 시도했음을 암시하는 발언도 합니다.), 해수부 공무원 녹취 1개(“정권 창출되기 전에 갖다 바치면서 문재인 후보가 비공식적, 공식적으로 약속했던, 해수부에 수산 쪽 제2차관 만들어주고 해경도 집어넣으려는 거다”), 해수부 해명 문장, 선체조사위 입장 문장 순으로 바뀜.

이후 뉴스제작1부장이 8뉴스 큐시트에서 기사 제목을 <‘인양 고의 지연 의혹’..다음달 본격 조사>에서<차기 정권과 거래?...인양 지연 의혹 조사>로 바꿈.

<게이트키핑>

5월 2일 오후 5시 42분부터 7시 20분 사이에 조OO 기자는 뉴스제작1부장이 교정한 최종 기사에 대해 “거래는 확인된 게 아니다” “제목에서 거래는 빼달라”며 4차례에 걸쳐 기사와 제목 수정을 요청함. 뉴스제작1부장은 기사 문장의 주어는 모두 해수부로, 해수부가 거래를 시도하려 했다는 의미이며, 제목에서도 거래 뒤에 물음표를 붙여(‘거래?’) 단정하지 않았다는 등 최종 기사를 고칠 이유가 없다고 조 기자의 수정 요청을 거절함.

오후 6시 전후해 해양수산부를 취재하는 경제부 표OO 기자(세종시 근무)는 기사에 나오는 공무원이 공보과장이 아니라 주무관급(6급 이하)인 것 같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기사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경제부장에게 전달함. 오후 6시 30분쯤 경제부장은 보도국장을 찾아가 표 기자의 의견을 전달함.

보도국장은 편집회의에서 발언 녹취를 중요하게 쓰지 않기로 했고, 편집회의 지시대로 기사가 작성됐을 것이라고 생각해 기사를 보지 않았다고 진술. 경제부장이 보고한 뒤에도 기사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진술함.

뉴스제작부국장은 방송 전 기사를 보고 ‘거칠다’고 생각했으나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음.

보도본부장은 오후 2시 20분 편집회의에 앵커 자격으로 참석했으나 해당 기사를 논의하는 시간에 회의실을 들락날락해서 편집회의에서 이 기사에 대해 논의한 내용을 듣지 못했다고 진술. 오후 6시 30분쯤 큐시트에서 전체 기사를 훑어봤는데 이 기사의 제목과 내용은 제대로 보지 못했다고 진술함.

<보도 후 조치>

보도국장은 보도가 나간 뒤 2시간여 지난 시점에 보도국 기자로부터 문제 있다는 연락을 받고, 기사를 확인함. 9시 35분쯤 보도국장이 인터넷 기사의 제목 수정 지시, 이후 국민의당에서 대표와 수석대변인이 SNS와 공식 논평을 통해 '문재인 후보가 해수부와 거래해 세월호 인양을 고의 지연 시켰다'고 단정해 확산하면서 여론이 크게 악화되었고, 보도국장과 보도본부장은 전화로 대책을 논의함. 마감뉴스인 <나이트라인>에 대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 당일 야근자들이 회의에서 논의하여 해당 뉴스를 제외하기로 결정함. 5월 3일 새벽 보도본부장은 직권으로 인터넷 기사를 전면 삭제하라고 지시. 이후 아침뉴스에 사과 및 해명 기사를 방송하고, 8뉴스에서는 톱으로 5분 30초가량 사과 및 해명 방송을 내 보냄.

4. 문제점

-부실한 취재

애초의 기사 취지는 해양수산부가 임의로 세월호 인양을 지연시키거나 앞당기는 등 권력의 눈치를 본다는 것에 대한 비판이었음. 해수부 공무원의 "세월호 인양은 해수부가 문재인 후보에게 갖다 바치는 것"이란 발언은 이런 맥락에서 해석되나 하위직 공무원의 발언 녹취만으로 기사를 쓸 수 없는 만큼 해수부 내 복수의 취재원을 통해 확인하고 교차 검증하는 취재가 필수적임. 또 해당 공무원의 소속과 직급, 맡고 있는 업무를 정확하게 파악해 신뢰할 만한 취재원인지 검증하는 과정도 필요함. 해수부에 대한 비판 취지라도 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가 거론되는 만큼 해수부의 이런 상황에 대한 후보 측 입장을 취재해 기사에 반영하려는 노력도 필요했으나 그러지 않았음.

-부적절한 데스크

편집회의 결정은, 이 기사에 대해 선체조사위원회 시행령 통과와 선체조사위원회가 해수부의 인양 지연 의혹을 조사한다는 내용을 앞세우고 해수부 공무원의 발언 녹취는 해수부 내부에 이런 분위기도 있다는 정도로 신중하게 쓰라는 것이었음. 기사 초고에 해수부의 인양 지연 의혹 조사와 공무원 발언을 병렬 배치해 비슷한 비중인 것처럼 처리하고 후보자 실명을 쓰는 등 여러 문제가 있었음. 기사 데스크킹 과정에서 이런 문제점을 교정했어야 하지만 뉴스제작1부장은 선체조사위원회 부분은 축약하고 대신 해수부 공무원의 발언 녹취를 나눠 배치하면서 초고에 없던 "부처의 자리와 기구를 늘리는 거래를 후보 측에 시도했음을 암시하는 발언도 합니다"라는 문장을 추가함. 또 <인양 고의 지연 의혹 조사>라는 기사 제목을 <차기 정권과 거래? 인양 지연 의혹 조사>라고 바꾸면서 부적절한 거래가 오갔다는 것으로 기사 취지와 다르게 읽힐 가능성이 더 크게 기사를 고침.

-허술한 게이트키퍼

조 기자가 발제한 기사는 편집회의의 통상적인 절차대로 기획서를 올려서 논의하지 않아 보도본부 내 다른 성원이 기사 취지를 살펴볼 기회를 갖지 못함. 사실상 '취재기자-담당 부장'의 두 단계

만을 거쳐 기사가 작성되고, 방송됨. 보도의 결함을 걸러내야 할 편집회의에서 공무원 직급 등 취재원의 신뢰성을 두고 논의를 하였지만, 참석자 누구도 정확한 발언의 내용(“문재인 후보에게 갖다 바치는 것”)을 확인하지 않았음. 취재원 신뢰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으나 보도국장은 아이템 채택을 보류하거나 추가 확인 취재를 지시하지 않음. 대신 ‘신중히’라는 단서를 달아 해당 공무원의 발언 녹취를 사용해도 좋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 기사 초고가 작성되고 이후 방송되기 까지 담당 부장의 상급자인 뉴스제작부국장, 보도국장, 보도본부장 중 누구 하나 편집회의 취지와 다르게 기사가 교정됐다는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음. 편집과 게이트키퍼 업무를 담당하는 뉴스제작1부에서 일반 취재부서처럼 기사를 쓰면서 최종 게이트키퍼 과정이 생략된 것도 문제였음..

-뉴스 제작 시스템의 문제

SBS는 지난 해 2차례에 걸쳐 조직개편을 실시함. 이 과정에서 본래 뉴스 편집기능을 주로 담당하던 뉴스제작국(구 편집국)에 뉴스 취재 기능이 부여됨. 일반 취재부서의 경우 출입처 담당기자가 차장과 기사를 논의하고, 다시 부장에게 보고한 후 편집회의에 발제 하는 과정의 게이트키퍼를 거침. 반면, 뉴스제작1부는 8뉴스 기사 작성이 일상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다른 기자들은 <사실은> 코너를 담당하고 있으며, 부장 또한 8뉴스 편집 등의 고유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고 있어 부서 내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기 힘든 구조임. 이런 시스템상의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별도의 게이트키퍼를 거치는 단계가 필요했으나 사전에 대책이 마련되지 않음.

SBS가 뉴스제작1부에 취재기능을 부여하고, 기사 작성 및 출고 과정에서 부장 책임 하에 게이트키퍼를 축소 한 것은 출입처 중심 뉴스의 한계를 극복하고, 보도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한 의도였음. 이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번 사태에서 나타난 뉴스 제작 시스템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합리적 대책을 찾아야 함. 경영진의 개입 없이 보도국 성원이 자유롭게 참여하는 토론의 장을 마련하여 뉴스 제작 시스템을 재점검하고, 평가하는 작업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판단함.

5. 조사 방법과 한계

이번 조사는 SBS 보도본부 보도정보시스템에 남아있는 기록을 확인하고, 취재기자와 담당 부장, 보도제작부국장, 보도국장, 보도본부장 등 해당 기사의 보도라인에 있는 보도책임자들을 대상으로 2회의 면담 조사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됨. 그 외에도 관련자 면담 및 증언 청취, 그리고 조사 대상자들이 제출한 관련 자료를 분석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함. 다만 조사위원회는 일반 수사기관들처럼 강제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조사 대상자들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자료와 관련자들에 대한 인터뷰를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음.

6. Q&A

Q) 조 기자는 왜 4월 16일에 통화한 내용을 5월 2일에 기사로 썼나?

A) 조 기자는 해당 해수부 공무원과 4월 16일 이후에도 17, 18, 24일과 5월 2일까지 수 차례 통

화를 했음. 기사에 쓴 핵심 발언은 4월 16일 통화에서 나온 것이나 이후 통화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했다고 진술. 첫 발제가 4월 28일에 이루어진 것은 조 기자가 4월 27일 8뉴스에 <3년만에 돌아온 새 청바지> 기사를 쓴 뒤 이후 발제한 것으로 보임. 다음 발제가 5월 2일에 이뤄진 것은 선체조사위 시행령이 이날 통과한 걸 확인했기 때문.

Q) 해수부는 해당 공무원이 인터넷뉴스를 보고 말한 것이며 무단 녹취하고 편집해 방송한 것이라고 했는데 그대로인가?

A) 4월 16일에 먼저 전화를 걸어온 것은 해당 공무원임. 첨부한 통화 녹취록을 보면 인터넷 뉴스를 봤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으며 문맥에 맞지 않게 편집해 보도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님. 통화를 동의 받지 않고 녹취한 것은 사실이나 5월 2일 보도 전에 조 기자는 해당 공무원과 통화해 보도하겠다고 전했고 신원이 확인되지 않도록 음성 변조해 방송하는 조건으로 허락 받은 것으로 확인.

Q) 뉴스제작1부장은 왜 편집회의 취지나 기사 초고와 다르게 기사 구성을 바꾸고 제목을 고쳤나?

A) 뉴스제작1부장은 이 기사를 쓰는 이유가 해당 공무원의 발언 때문이라고 생각했고 다른 내용은 부차적인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발언 내용을 중심으로 기사를 수정했다고 진술함. 공무원 발언에서 문재인 후보가 거론되긴 하지만 이 기사는 해수부를 비판하는 내용이며 “부처와 기구를 늘리는 방향으로 거래를 시도했음을 암시하는 발언을 하기도 합니다.” 라는 문장에서도 주어는 해수부였다고 해명함. 이 문장을 추가하면서 뉴스 후반부 내용을 기사 제목에 반영했다고 밝힘. 최종 기사가 의도와 다르게 읽힐 가능성이 높았다는 건 뒤늦게 깨달았다고 진술.

Q) 기자의 기사 발제와 부장의 교정 과정에 다른 의도가 있지는 않았나?

조 기자는 해수부가 세월호 인양을 지연했거나 서둘렀다는 의혹을 비판하기 위해 취재하고 기사를 발제했다고 진술. 실제로 조 기자는 그 동안 여러 차례 해수부를 비판하는 기사를 써왔음. 최초 통화와 기사 발제 시점이 차이가 나는 건 일반 취재부서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업무를 하면서 틈틈이 취재했고 1차 발제가 채택되지 않았기 때문. 뉴스제작1부장은 기사를 더 주목받도록 교정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실수를 했다면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기사를 수정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함. 1차 발제부터 보도가 나가기까지 과정에서 외부로부터 압력을 받았거나 악의적인 의도로 단정할 만한 흔적은 발견하지 못함.

Q) 이 기사가 여러 단계의 게이트키퍼 절차가 있는데도 걸러지지 않고 보도된 이유는?

A) 이 기사를 작성해 출고한 부서는 뉴스제작1부로, 평소엔 SBS 8뉴스 큐시트의 편집과 방송을 담당하는 부서임. 인력 구성 자체가 편집 기능에 집중돼 있어 일반 취재부서와 달리 발제와 기사 작성이 일상적으로 이뤄지지 않는 부서이며, 중간 데스크 역할을 하는 기자도 없는 구조. 특히 일반 취재부서에서 출고된 기사를 최종 게이트키퍼하는 역할을 통상 뉴스제작1부에서 수행하는데 뉴스제작1부에서 출고된 기사는 구조상 이 절차가 생략됨. 또 5월 2일 대선 후보 마지막 토론 중계로 인해 8뉴스가 한 시간 일찍 19시에 시작된 데다 상급자인 뉴스제작부국장, 보도국장, 보도본부장이 편집회의 이후 이 기사를 확인하지 않아 보도의 결함이 걸러지지 않고 그대로 보도됨. 편집회의 논의과정과 기사 작성 후 방송 전까지 여러 차례 취재원과 정보 신뢰도에 대한 문제가 제

기됐으며, 게이트키퍼 책임 선 상의 간부들도 이를 인식하고 있었으나 직무를 태만히 하면서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음.

***[참고] 해수부 공무원 통화 녹취록**

#4월 16일 통화 중에서

(조 기자) 네 여보세요

(해수부 공무원) 조기자님? (네) 저를 기억하실 지 모르겠는데, 000 계실 때 00 선배예요.

(조 기자) 아 네 안녕하세요.

(공무원) 지금 제가 어디 있는지 아시죠? 저 해수부 000실에 있어요. 아침에 통화했잖아요. 제가 그 옆에 있었거든요.

(조 기자) 아 그러셨구나. 안녕하세요.

(공무원)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옆에서 전화 끊고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도 다 말씀드릴 수도 있는, 조 기자님과 저랑 그런 사이인데 아는 사이라고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었거든요.

(조 기자) 네 그러셨구나

...중략...

(공무원) 000 본부장이라든지 이분들과 밥을 먹으면 4월 16일부터는 이제 우리에게 우호적으로 바뀔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게 맞는 건지. 여론 조사 보면 제2특조위 만들어져야 한다 이런 지지율이 훨씬 더 60% 정도 나오니까 높거든요. 이분들이 생각하는 건 흔히 말하는 샤이 말하지 못하는 일반 대중들이 더 많다 댓글도 왜 배를 댄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결국 보고 싶은 것대로 보는 건지, 아니면 일반적인 시각이 그런 건지 너무 궁금해요, 저도 중간에서 끼어갖고. 저 시각은 좀 위험한데 할 정도로 굉장히 낙관하고 있어요. 잠잠해질 거라고.

솔직히 말해서 이거는 문재인한테 갖다 바치는 거거든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문재인한테 갖다 바치는 거예요 우리 역할은. 정권 창출되기 전에 문재인한테 갖다 바치면서 문재인이 약속했던 해수부 제2차관. 문재인이 잠깐 약속했거든요, 비공식적으로나, 공식적으로나. 제2차관 만들어주고, 수산쪽. 그 다음에 해경도 집어넣고. 이런 거가 있어요. 빨리 인양한 건 맞아요. 인양한 건 맞는데.

...후략...

#5월 2일 통화 중에서

(조 기자) 지난번 말씀해주셨던 부분 있잖아요. 탄핵 국면에 맞춰서 인양이 진행된 부분이요. 세월호 인양은 다음 유력 후보에게 바치는 거라는 맥락의 내용은 이게 사실 일반 해수부 직원 말이지만 직원들 사이에서 팽배한 내용이고 이것도 하나의 정황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그래서 누군지 신원 확인할 수 없게 목소리 바뀌어서 성씨나 이런 것 밝히지 않고 보도하려고 해요.

(공무원) 네네. 뭐가 어찌됐든 저는 열심히 일할 테니까요, 취재 열심히 하시고요. 취재원 비밀권이라든지 은닉권 이런 부분은 공부를 잘 하셨으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알고 있겠습니다.

(조 기자) 당연히 지켜드릴 테니까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공무원) 네네.

(조 기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무원) 네네.